

#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안광림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5105 |
|----------|------|

발의연월일: 2023년 3월 일

발 의 자: 안광림, 이준배, 김장권, 서희경,  
김보석, 김보미, 조우현, 서은경,  
이영경, 황금석, 박주윤  
(이상 11명)

## □ 주 문

- 안심전세앱 기능확대, 보증제도 악용방지, 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함.
-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집값을 실세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가 적용을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함.
-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되도록 임대인·중개사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엄중 처벌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 계류·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함.

## □ 제안이유

- 최근 900억원대 전세 사기 및 강통전세 등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전세 사기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성남시는 네 번째로 많은 30건이 접수됐음.
- 그간 임차인은 전세 계약 시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에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택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2800여 세대에 9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인천시 전세 사기 사건, 집값이 전세금보다 싼 강동전세 상태인 이른바 서울시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전세 사기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이달 초까지 4개월간 접수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접수자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총 511건으로 접수된 31개 시군구 중 성남시는 네 번째로 많은 30건이 접수됐으며, 계속 피해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 계약 시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에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심전세앱 기능확대, 보증제도 악용방지, 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집값을 실세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가 적용을 낮추는 등 주택 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되도록 임대인·중개사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엄중 처벌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 계류·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 3. .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